

민주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활동 마무리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배제... 현역 페널티 강화”

권리당원 70% · 여론조사 30% 변경 제안
현역 의원 평가시 '공직윤리' 항목 신설 촉구
현역 중진 · 출마 준비당 원로 용퇴요구
당 미래화 방안으로 '미래대표제' 도 제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원제'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 규칙 변경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원·당구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

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는 안도 담겼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 의원 공천 시 페널티 적용'은 최종 안에는 빠졌지만 현역 중진 의원들과 출마 준비를 하는 당 원로들의 용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엔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신 분들을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들한테도 다시 출

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시길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이가 민주당 미래화 방안으로 미래대표제를 제시하며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인사 위주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인공지능, 기후대응,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재난 등 미래 여건에 능한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

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지난 6월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면적 혁신을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다. 당초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폼하 발언 등 잇단 설화로 동력을 잃으면서 이날 최종 혁신안을 내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발표할 땐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활동 종료 소회를 묻자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병치를 향했던 길 끝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최고위,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

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 대표 후보자 '부적합' 의견

군산시 최초로 개최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10일 제3차 회의로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 종합의견 부적합을 채택하고 7월 25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활동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군산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개최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경구 위원장 서동완 부위원장을 포함해 서동수·설경민·윤신애·최창호·한경봉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후보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검토 및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종합결과보고서에 밝힌 채 후보자에 '부적합' 사유는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신청 필요,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 의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저해 우려 등이다. 군산시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은 "군산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인사청문회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사전에 검증을 함으로써 군산시 신화 대표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군산시의회의장을 거쳐 군산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군산=김대환 기자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1심 “매우 경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병근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 맞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 역시 없었다며 정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괴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한 점, 수사가 느리게 진행됐지만 이를 정 의원의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형으로 인해 국회 의원 직무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불가진 노 전 대통령이 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권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스

“이재명 체제 유지 전제 시 혁신 불가”

민주 윤영찬 의원, 대의원제 폐지에 '기득권 강화하는 길 선택'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할 혁신안에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재명 대표 유지를 전제로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혁신안을 짤 수밖에 없다'는 한 혁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 체제가 잘 가고 있으면 뭐 하러 혁신위가 만들어졌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자세로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영리한 설화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고 해체하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무엇을 발표하더라도 이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많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부



연했다. 혁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제 문제를 반대한다, 아니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꺼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얘기이고, 전당대회는 내년이나 예정된 것"이라며 "그걸 왜 지금 꺼내서 평가판을 일으키느냐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는 혁신위 활동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기준에 잘못했던 기득권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을 제시해야 혁신위가 제 길을 가는 것"이라며 "그건 손을 안 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돈 봉투 사건, 팬덤정치, 방탄장막, 민주주의의 후퇴 때문 아니었나.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고 언급했다. 또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만한 사안들 특히 정파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하면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윤준병 의원, 지역위원회에 태풍대비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태풍 카눈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비상상황실에서는 정읍시·고창군청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과 24시간 소통하며, 기상예보 및 피해상황 등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공유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민원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 기초의원지역구 단위로 주민자치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침수 및 강풍 피해 요인을 구석구석 직접 다니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도·시·군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풍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확인 김관명 도지사는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일 전주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찾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하고 있다.

“남 탓·책임 떠넘기기만...尹, 국정 쇄신을”

민주 윤준병 원내부대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0일, "외교안보·경제·노동·교육·인사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온전한 곳 하나 없이 연일 무능의 사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은 온데간데없고 남 탓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이게 정부냐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대화만 해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상화와 부실 운영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며 "이에 윤석열 정권은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다며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캠버리 대화가 시작되자 윤석열 정권의 호언장담은 엉망진창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캠버리 개성시부터 운영집행자가 속출했고, 배수와 부대 시설 부실 등 열악한 환경과 미숙한 운영으로 세계적 조롱을 받고 있다"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우선 순위"라며 "새만금 캠버리대화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를 지적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캠버리 준비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난맥상이 드러

/정읍=김대환 기자